

2부 역사와 균열

사 회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발 제

주제 3 : 한국 민주화운동과 반공주의 - 반공주의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 발제 : 김귀옥 (성공회대 연구교수)

주제 4 : 동아시아의 20세기와 미국,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 발제 : 이삼성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제 5 : 한국사회와 학생운동, 그 회고적 전망

- 발제 : 김정인 (한국 국가기록연구원 책임연구원)

토 론

- 김일영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정일준 (아주대 국제학부 교수)

- 김정한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 황인성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사무총장)

동아시아의 20세기와 미국, 그리고 한국민주주의

이 삼 성 (한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인식의 문제의 총체성

미국은 해방된 한반도의 남쪽을 군사적으로 장악한 이후 이 땅에 자신의 모습을 닮은 정치질서와 경제질서를 심었다. 사유재산과 자유기업의 원리에 바탕을 둔 경제질서,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담은 헌정 틀을 남한에 심었다. 그러나 미국은 거의 모든 정치 국면과 전환기마다 민주주의라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고, 그것을 우선시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부차적이고 주변적인 가치였다. 안보와 함께 민주적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세계의 모든 사회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그것을 미국인들은 언제나 인식하고 있었고, 한국인들도 그러한 인식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문제는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다. 미국은 자신의 모습을 본떠 한국에 심어놓은 민주주의의 형식이 독재, 나아가 군사독재체제로 변질되는 과정에서조차 자신이 중시하는 이해관계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독재와 군부세력에 대해 협력자로 행동했다.¹⁾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의 영향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남쪽만이라도 우여곡절 끝이긴 하지만 민주주의의 행운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기본인식이 담겨져 있다. 한반도의 남쪽을 포함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적 위치에 대한 지극히 긍정적인 역사적 평가가 그 하나다.

그리고 미국의 영향권에 속하는 행운이 아니었다면 한국이 아시아적인 상황에서 민주적인 삶을 향유할 기회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깊은 자기불신, 그리고 아시아를 포함한 미국의 영향권에 속하지 않은 세계의 자기혁신 능력과 역사발전능력에 대한 총체적 부정과 불신이 가로놓여

1) 이승만 독재정권의 몰락과 5.16군사쿠데타 직후에 이르는 시기 미국의 대한정책, 그리고 1979년 초에서 1980년 5월 광주학살을 통해 전두환 군사독재체제가 확립되기에 이르는 시기에 미국의 대한정책의 전개에 대한 필자의 인식은 각각 다음의 줄고들을 참고하십시오. 이삼성,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주주의: 광주항쟁, 민족통일, 한미관계』, 한길사, 1993, 55-63면; 이삼성, 「광주를 통한 한국민주주의의 유혈통로와 미국의 위치: 1979-80년 미국 대한정책의 치명적 비대칭성」, 한국정치학회 주최 학술회의, 1997년 5월 8일.

있다. 전후 소련의 영향권에 편입되었던 동구 사회들이 1980년대 후반 본격화된 소련의 개혁과 함께 민주적 변화를 겪기 시작했던 시점과 한국이 군사독재의 수렁에서 헤어나기 시작했던 시점이 비슷하다는 사실은 그러한 인식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한다.

해방직후 카이로선언에서 미국, 소련, 영국 등 열강들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한국인들에게 보장하기로 한 독립이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한반도에서 민주주의의 성장과 정착은 일련의 고통스런 시련과 우여곡절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분단과 전쟁과 또 그 덕으로 더욱 강고해진 분단체제 속에서 남한에서 수십년 동안 지속된 독재와 군사독재, 그리고 북한에서의 끝날 줄 모르는 정치적 경제적 피폐라는 현실역사의 전개는 그 어떤 다른 가능성도다도 더 많은 인간적 비용을 강요해온 ‘최악의 역사적 코스’ 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고 또 잊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이 원폭 두 개를 연거푸 터뜨리며 서둘러 한반도 점령을 앞당기고 분단선을 그으며 한반도의 운명에 결정적으로 간여하기 시작한 것이 그 후 반세기 한반도 전체차원에서 “민주적인 삶”에 기회와 행운이 아니라 불행한 질곡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사유하지 않는다. 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반도 전체가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안지 않은 채 자기혁신과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적인 삶을 지향해 나갔을 다른 가능성, 미국의 질서 아닌 다른 질서 속에서 더 작은 인간적 비용을 치르며 한반도에서 민주적인 삶이 성장해갔을 열린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역사적 상상력은 우리가 겪어온 현실역사와 그것을 지배해온 논리와 이미지에 근원적으로 갇혀있다.

한국민주주의에 미국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은, 한국의 현대정치사에서 한국의 독재 세력들에 대해 미국이 얼마만큼의 협조와 견제를 했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논증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총체적 인식의 문제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의 근현대에 대한 근원적인 절망과 그 절망의 세계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된 미국의 이미지가 자리잡고 있다. 이 이미지의 미국은 아시아의 근현대의 어둠에 참여한 세력이 아니었다. 그 어둠의 일부가 아니었다. 아시아의 역사에 여러 가능성들을 앞장서 폐쇄해버린 그런 권력이 아니었다. 미국은 아시아에 있다는 그 자체로서 새로운 역사를 열고 창조한 존재였다. 이러한 이미지의 실상과 허상을 정면으로 다루는 다양한 논의는 아직 결코 충분하지 않다. 이 글에서 19세기 이후 20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의 동아시아 질서에 결부시켜 미국과 한국민주주의의 문제를 얘기하려는 것은 먼저 우리 사유에 어떠한 종류의 공백이 자리잡고 있는가를 더듬어보기 위해서이다.

2. 전후 한국의 정신적 상황과 '아시아의 부재'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고 식민지 한반도의 남쪽을 점령한 미국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지 이제 반세기를 훌쩍 넘겼다. 이 적지 않은 세월 속에서 한국인들의 정치적 삶에 미국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 특히 객관적 차원에서 한국인들의 정치적 삶의 질에 어떤 결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느냐 하는 것은 단지 과거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을 떠나서 한국인들이 스스로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해묵은 것이면서도 여전히 결정적인 문제에 관계되어 있고, 이것은 적어도 한반도에서는 과거나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미래적인 함의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방과 함께 그리고 곧 이은 1947년 트루먼독트린 시대 이후 남한의 한국인들의 정신적 지평에서 아시아는 사라졌다. 일본은 "역사" 때문에 한국인의 정신 속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그것은 1965년 박정희정권에 의한 관계정상화로 인해 관계의 일부가 복원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경제관계는 존재하였으나 정치적 소통도 문화적 소통도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는 냉전시대의 "현실" 때문에 한국인의 지적 지평에서 사라져 있었다.

잔류한 것은 북한과의 대결이라는 지극히 한반도적인 현실에 대한 광적인 정치, 군사적 집착이 하나였고, 그 다른 반쪽에는 아시아가 사상(捨象)되어 있는, 아시아를 건너뛰어 버린 [세계(the world)]가 있었다. 그리고 그 세계의 한 가운데에 미국이 있었다. 그래서 해방 이후 반세기에 가까운 시기동안 한국인의 지적 지평은 지극히 한반도적인 동시에 지극히 전지구적인 것이었고, 그것은 한반도와 세계를 연결하는 한 공간적 지적 지평으로서의 "아시아의 부재"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었다.

바다의 동쪽에는 '반성하지 않는 과거의 식민주의자들'이 있었으며, 바다의 서쪽에는 형편없이 하향평준화된, 힘이라고 할만한 것은 숫자의 힘밖에 없을 것 같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대륙의 이미지가 존재했다. 한국인들에게 이것은 숨 막히는 공간이었다.

이 모든 것은 일본 제국주의와, 중국 인민주의와 소련 공산주의라는, 동아시아 세계의 전제주의적 역사와 정신적, 경제적 후진성에 연유하는 것이었고, 한국의 불행은 이 지리적 공간의 한 부분에 속해있었다는 사실에 있었다. 아시아와 그리고 그 아시아에 속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불행 의식, 말하자면 한반도의 지정학에 대한 불행 의식이 냉전시대 한국인의 내면 깊은 곳에 여러 가지 형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아시아적인 것, 아시아의 전통과 현재에 대한 총체적인 부정과 비판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후 남한에서 진행된 세계역사에 유

레없는 기독교인의 팽창 속도는 그러한 정신적 상황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신세계 속의 이 같은 아시아의 부재가 수행한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이 하나 있었다. 우리는 지워져야 할 아시아의 일부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반쪽인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와의 절연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남한의 일그러진 자유민주주의가 당시의 아시아적 인민민주주의에 비해서 더 역사적 진보에 가까운지 판단할 근거가 불투명하던 시절에, 우리는 아시아에 대한 지독한 경멸과 증오를 내면화하였다. 그것은 아무리 영터리 자유민주주의라도 좀더 서양적이고 미국적인 것이면 아시아적인 것보다는 더 나은 것이라는 걸 뜻했다. 그 몹부림 가운데에서 우리의 지속되는 정치적 후진성은 수천년, 수백년에 누적된 후진성의 상속자로서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 운명의 몫이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운명적 부담은 아시아적 전제주의를 봉쇄하고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른바 “안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혼란 논리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 아시아와의 절연이 아니라, 아시아와의 열린 소통의 구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능할 수 있었던 열린 역사에 대한 상상력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데 있었다. 이 아시아에서 아시아의 일부로서 숨쉬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한반도와 아시아의 열린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사유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정신적 조건은 탈냉전과 더불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화되기에 이르렀다. ‘현실 자본주의’에 의한 ‘현실 사회주의의 패배’로 규정되는 ‘역사의 끝’으로 인해 오히려 더 응결된 형태로 탈냉전 이후 우리의 현대역사에 대한 관념을 지배하게 되었다. 전후 한반도의 역사가 현실 자본주의와 현실 사회주의 사이의 열전과 냉전에 의하여 지배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 군사정치 이념적으로 응결된 이분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역사일 수 있었을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을 봉쇄한 반세기의 역사적 구조에 대한 사유를 우리는 거부당하고 또 거부해왔다.

3. 한반도의 민주적 삶과 미국

한국의 민주주의에 미국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은 두 가지 핵심적인 명제로 요약된다. 아시아적 전제주의, 그 공산주의적 형태를 북한에만 국한시키고 최소한 남한만이라도 그 전제주의로부터 자유롭게 했다는 명제가 그 하나다. 남한에서 미국이 뒷받침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가 완벽한 것은 아니었으나, 안보적 요청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안보적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진지하게 노력했고 또 그러한 과정이 가능한 구조적 조건을 마련해주었다는 것, 이것이 그 두 번째 명제다.

이 명제들에 대해 다소 거시역사적인 비평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이 전제적 공산주의로부터 한반도의 반쪽을 지켜냈다는 것이 사실인가에 대한 비평은 두 가지 차원에서 가능하다. 1950년의 시점에서 북한이 군사적 모험주의로 반도의 남쪽에 안보위기를 초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 어느 쪽이 아시아적 전제주의를 체현해내고 있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북쪽의 전제주의로부터 남쪽의 민주주의를 구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그 명제는 결코 진실이라고 하기 어렵다.

두 번째 비평의 포인트는 직접적으로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비롯된 한반도 전쟁을 초래한 냉전구조의 전개에 미국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에 관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냉전의 주된 추동력이 소련이었는가 미국이었는가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으로 연결된다. 필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미국 트루먼 행정부가 전후 세계질서 주도를 위해 소련에 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preponderance of power)를 추구한 점이 주된 추동력이었다는 멜빈 레플러의 논증이 설득력이 있다고 믿는다.²⁾ 또한 아울러 자본주의의 엄호와 확장을 도모하며 소련을 압박해간 미국의 전후정책을 중시하는 세계체제론적 설명들의 적실성을 강조한 브루스 커밍스의 인식에도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왔다.³⁾ 그러나 이 문제는 필자가 다른 연구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 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위의 두 번째 명제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냉전구조의 아시아적 고착에 있어 미국의 역할의 의미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태평양전쟁 종결 이후에도 중국의 내전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개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개된 중국 공산당의 대륙장악 그리고 그에 뒤이은 미국의 선택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아시아적 냉전질서의 전개에 가진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시아 냉전의 구조는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의 직접적인 환경이었으며, 그 환경은 전쟁 이후 한반도의 남북 모두에 반민주적이고 억압적인 정치질서가 뿌리내려 사람들이 수십년간 고통스런 질식 상태 속에서 살아야 하는 기본조건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 국민당-공산당간 내전에 미국이 깊은 파당적 개입을 지속한 데에서 출발하는 것

2) Melvin P. Leffler, *A Preponderance of Power: National Security, the Truman Administration, and the Cold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2.

3) Bruce Cumings, “‘Revising Revisionism,’ Or, The Poverty of Theory in Diplomatic History,” Michael J. Hogan, ed., *America In The World: The Historiography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Since 1941*,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p.20-62.

이었다. 일본의 중국침략에 대항하는 국민당정부를 미국이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당정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일본의 항복 이후 본격화된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에서 더욱 본격화되었다. 중국대륙이 공산당을 선택하였을 때, 그래서 공산당이 중국을 통일했을 때, 미국은 대륙의 공산당정권을 승인하기를 거부했다.

미국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미국과 정치경제적 신념체계를 달리하는 또 하나의 소련 같은 정권이 유라시아대륙의 남은 반쪽을 장악하는 사태를 미국이 반길 수 없다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일본 제국주의와 대항하는 공동전선에서 장개석정권과 미국이 쌓아온 유대관계 또한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인들이 중국 공산주의 혁명의 성공이 아시아인에게도 불행한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신념체계와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도 분명하였다.

그러나 수천년간에 흥멸했던 농민반란과 달리 모택동의 공산당이 체계적인 정치사회적 신념체계와 항일 저항의 업적에 바탕해 중국 대륙 인민에 의해 선택된 것임이 분명해지는 시점까지도 중국이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거부한 것은 비록 그것이 미국에게는 자연스런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동아시아와 한반도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4. 해방전후사의 동아시아적 배경과 미국의 선택의 의미

미국이 2차대전에서 승기를 잡음으로써 전후의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의 전후질서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카이로 회담이 있던 1943년 말경이었다. 당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간의 내전이였다. 내전이 발전할 경우 항일전쟁 전선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소련이 중국공산당을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장차 중국 공산당과 소련과의 동맹에 의하여 동북아에서 중국 국민당 정권과 미국의 위상이 위협받게 될 것을 걱정했다. 미국의 대책은 1943년 초 이래 국민당과 공산당이 다같이 명분상 지지하며 재개한 바 있는 국공합작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당의 위치를 강화하는 것이었다.⁴⁾

국민당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루즈벨트정부의 노력은 세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었다고 존 페어뱅크 교수는 요약한 바 있다. 첫째, 국민당 정부와 장개석의 상징적인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킨

4) John King Fairbank, *The United States & Chin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Fourth Edition, 1979), p.340.

다. 둘째, 국민당 군대 강화를 지원한다. 셋째 국민당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자체개혁을 유도한다.⁵⁾

중국은 1943년 8월 퀴백에서 열린 미·영 회담에서 연합국 전쟁최고사령부에서 제외되었으나 미국의 지지로 동년 10월 미·영·소와 함께 모스크바 4대국 선언에 포함되었다. 12월에는 미·영·중 3국 수뇌의 카이로선언에서 일본에게 빼앗겼던 모든 영토의 회복을 약속받았다. 그 선언 직후에 열린 테헤란회담에서는 루즈벨트가 장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중국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페어뱅크는 이처럼 2차대전 기간에 장개석 정부가 적어도 명목상 대국의 위상을 획득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지원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조한다.⁶⁾ 그러한 미국의 행동은 당시에는 한 위대한 인민에 대한 우호적 제스처로 간주될 수 있었으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내적으로 이미 영락해가고 있는 정권을 밖으로부터 명목상 강화하려는 노력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페어뱅크는 지적했다. 미국의 정책은 중국역사에 대한 미국의 지배욕구에서 나온 경직된 노력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⁷⁾

국민당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 노력으로 미국은 스틸웰 장군의 주도하에 국민당의 육군과 공군을 현대화시키고 1천여 명의 군사고문단을 파견하여 31개 사단에 이르는 국민당 군대를 훈련시키고 이들에게 장비를 제공했다.⁸⁾

루즈벨트 행정부 기간 국민당정부를 강화시키고 국민당과 공산당간의 항일공동전선을 도모한 미국의 대중국외교에서, 국공합작과 국민당정부의 자체개혁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반면에 국민당정부의 군사력과 그 물질 기초를 강화시키고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켜준 것과 같은 노력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특히 루즈벨트정부는 알타회담에서 전후 국민당정부의 위상을 강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아시아질서를 구축하는 구상을 실천에 옮기고 있었다.

루즈벨트정부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시각은 양면성을 띠고 있었다. 루즈벨트가 사망할 무렵인 1945년 4월에 열린 제7차 중국 공산당대회의 정치보고에서 모택동은 미국·영국·소련간의 관계를 '반파쇼 민주세력의 단결'로 정의했다. 그는 이어서 "국제관계의 주요문제들은 주로 3대 강국 또는 5대 강국에 의한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⁹⁾

5) Ibid.

6) Ibid.

7) Ibid.

8) Fairbank, p.341.

모택동은 이 시기의 세계는 민주주의와 평화와 진보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파시스트와 반민주세력이 계속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3대 강국 또는 5대 강국이 이끄는 민주세력과 반민주세력간의 투쟁이 오래 계속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중국의 당면한 목표는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통일된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런 의미에서 모택동은 이 단계의 중국역사에서는 중국의 산업화와 부강(富強)을 돕는 한 외국의 투자도 환영한다는 태도를 취했다.¹⁰⁾

당시의 국제관계와 그 안에서의 중국의 당면목표를 그같이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미국이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 같은 인식은 1944년에서 1945년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오카베는 파악한다. 1944년 7월 4일 (해방일보)는 미국 독립기념일에 즈음한 사설에서 미국은 소련과 더불어 민주세계의 두 개의 별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루즈벨트 대통령과 헨리 월라스 부통령을 조오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앤드루 잭슨 및 에이브러햄 링컨처럼 미국의 민주적 전통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꼽았다. 이 사설은 또 미국은 태평양전쟁에서 불멸의 기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후에는 세계평화와 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전망했다.¹¹⁾

중국 내전의 종식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 대해서도 1944년 8월 모택동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존 서비스(John Service)와의 인터뷰에서 모택동은 “중국에서 내전을 방지할 희망은 어느 때보다도 다른 나라들의 영향력에 달려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나라는 미국이다”고 말하고, 또한 “미국 영향력의 도움 없이는 중국의 진정한 통일과 민주주의는 길고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¹²⁾

중국공산당이 미국을 이같이 우호적으로 본 것은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시각도 물론 가능하다. 그 내재적 한계의 핵심은 모택동 등 중국 공산당에게 있어 민주주의는 중국의 공산혁명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모택동에게 있어서 항일전쟁은 중국 혁명과정의 일부일 뿐이었고 민주주의의 달성은 국제적 파쇼세력 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의 파쇼세력의 타도를 포함하는 반제·반봉건 혁명을 의미했다. 그것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당독제를 종식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미국이 지지하는 국공 연립정권 수립은 그 같은 국민당독제의 극복에 도움이 될

9) Motakuto bunkenshiryo kenkyukai, (毛澤東文庫史料研究會) ed., Mao Tse-tung chi, (毛澤東誌) vol.9 (Tokyo: Aokubosha, 1971), p.186; Okabe Tatsumi, “The Cold War and China,” in Yonosuke Nagai and Akira Iriye, eds.,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Asia (Tokyo: University of Tokyo Press, 1977), p.225.

10) Okabe, Tatsumi, p.225.

11) Okabe, Tatsumi, p.226.

12) Ibid., p.226.

때에 한해서만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발전을 위한 물질 토대가 마련되면,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이든 폭력적이든 계급투쟁을 거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확립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목표였다. 그러므로 중국 공산당의 대미우호관계는 미국이 파시즘과 국민당독재 종식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¹³⁾

그러므로 미국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긍정적 시각이 퇴조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 국제정치에서 그러한 이념적 입장이 곧바로 갈등과 대결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 공산당은 루즈벨트 사후에도, 특히 마샬과 같이 상대적으로 중립적 색채를 띠었던 '민주적 세력'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 내전의 심화과정에서 트루만정권의 국민당 지지가 보다 노골화되었고, 미국에 대한 중국 공산당 내부의 우호적 시각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⁴⁾ 또한 국민당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지지가 미소관계의 냉각과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과 미국 사이의 관계는 더욱 빠른 속도로 악화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알타회담에서 미국은 소련으로부터 독일이 항복하면 유럽전선에서 군사력을 극동으로 돌리는 데 필요한 3개월 후 소련군이 대일전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를 대가로 소련은 극동지역과 관련해 루즈벨트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얻어냈다. 1904-5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 잃었던 영토의 회복을 보장받았던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루즈벨트는 중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 다만 장개석의 동의를 확보할 것을 스탈린에게 약속했다. 그 대신 소련은 만주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국민당정부에 대한 원조협정의 추진을 약속했다.¹⁵⁾ 즉, 알타회담에서 미국이 원한 것은 제정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서 누렸던 위치를 소련에게 회복시켜 주는 대신에 장차 중국의 국민당 정부를 소련이 지지하도록 한 것이었다.¹⁶⁾ 이러한 흥정은 1945년 8월 14일 체결되는 중·소협정을 통해서 마무리된다.

이처럼 알타에서 미국의 극동전략은 당면한 대일전을 이기고 동시에 중국 내부에서 국민당정권의 위치 강화를 위해 소련과 중국문제를 놓고 권력정치적 흥정을 하는 것이었다. 스탈린은 대일전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극동에서의 우월적 지위 보장을 내세웠다. 알타에서 루즈벨트는 중

13) Ibid., p.227.

14) Ibid.

15) 나중에 장개석은 이상의 타협안에 대해 "대체로 OK"라면서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Howard Jones, *The Course of American Diplomacy, Volume II, from 1897*, (Chicago: The Dorsey Press, 1985, 1988), pp.455-6.

16) John King Fairbank, *ibid.*, p.341.

국에서 소련의 치외법권적 권리(extraterritorial rights)를 승인하고, 그 대가로 소련과 중국 국민당정부간의 동맹협약 추진을 얻어냈던 것이다.¹⁷⁾ 말하자면 루즈벨트는 권력정치를 부정하면서도 권력정치의 방법으로 소련을 대일전에 끌어들이고 전쟁이 승리로 종결되면 중국 내전에서 공산당에 대해 국민당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내려 진력했던 것이다.

미국은 스탈린정부의 국제공산주의가 중국공산당을 통해 아시아대륙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 소련 스탈린의 행태와 그와 관련된 미소관계 양상으로 볼 때, 그 같은 인식이 충분히 정당화되기는 힘들다. 스탈린은 국민당정부가 대륙에서 대만으로 쫓겨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당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장(新疆)지역에 대한 소련의 이익을 위해 국민당과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당시 소련의 중국정책을 바네트는 이렇게 요약한다: “스탈린이 중국내전에서 공산당의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지 않았다고 믿을 이유는 없으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고, 러시아 영토 밖 혁명세력의 목표보다는 러시아의 직접적인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중국 공산당 세력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미국의 개입이 강화될 것을 스탈린은 두려워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공산당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보다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권력을 나눠 갖는 것이 소련의 이익이라고 느꼈을 가능성조차 있다. 그 동기가 무엇이었던, 혁명투쟁기의 중국 공산당에 대한 스탈린의 지원은 명백히 제한된 것이었다.”¹⁸⁾

따라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소련의 지원문제로 미·소가 심각한 갈등을 벌일 일은 없었다. 반면에 1945년 말 이후부터 중국공산당의 기세가 확대되면서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증폭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둔 미국의 중국정책과 아시아전략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역사적 선택과의 거대한 싸움이었고, 그것은 결국 동아시아에서 반드시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는 이데올로기적 대결과 그 군사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¹⁹⁾

1949년 8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장악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기 직전의 시

17) Sergei N. Goncharov, John W. Lewis, and Xue Litai,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2.

18) A. Doak Barnett, *China and the Major Powers in East Asia*, Washington D.C. :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7, p.25.

19) 일본이 항복했을 때 미국의 정책은 만주의 가능한 한 많은 지역을 국민당군이 접수하게끔 하는 것이었다. 만주로 이동한 장개석군대의 많은 부분을 미국공군이 수송했고 미국은 또 5만의 해병대를 중국 북부의 여러 주요 항구에 상륙시켰다. 트루만은 이것이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Harry S. Truman, *Memoirs, Vol. II, Years of Trial and Hope* Garden City, N.Y.: Doubleday, 1956, p.65.) 그러나 트루만정부의 근본적 의도는 일본군의 철수로 생긴 중국 주요지역의 힘의 공백을 공산당군이 메우기 전에 장개석군대가 그 지역을 장악하게끔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에, 트루만 행정부는 비로소 국민당이 지배하는 중국에 대한 집착을 접고, 공산화된 중국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도했다. 이른바 [중국백서](China White Paper)를 공개한 것이었다. 그것은 중국의 상황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객관적 분석문건이었다. 중국 내전의 결과는 미국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또한 장개석 정권이 자초한 결과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었다. 그것은 미국의 정치권과 여론이 중국의 역사적 선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트루먼은 국방장관과 군 합참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백서를 공개했다.²⁰⁾ 그러나 그의 노력은 곧, 특히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반공주의 여론에 밀려 좌초했다. 국민당을 일방적으로 지원해온 미국에 대해서 그리고 이른바 “제국주의자” 일반에 대해서,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반감을 중국 지도부가 통제할 수 없었던 점도 부정적 요인이었다. 그러나 장개석정권의 중국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미국인들이 미국 정부와 의회 안팎에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은 매우 중요했다.²¹⁾

무엇보다도 트루먼행정부 자신이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장악하는 마지막 시점까지도 장개석의 중국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 지원정책을 지속했다는 사실은 중국 공산당의 미국에 대한 인식을 지배하고, 또한 그 이후 미국 자신의 중국 및 아시아정책에 중요한 관성으로 남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 공포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미국의 외교적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은 그 사실과 근본적인 관계에 있다. 그로 인해 중국과 미국의 관계, 그리고 그에 바탕해 동아시아 전체가 이데올로기적 장벽을 넘어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로 남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내포한 미국의 선택은 결국, 미국의 주도하에 설정된 분단선, 그리고 역시 미국의 주도하에 추진된 남한 단독정권의 수립이라는 조건들과 결부되어 한반도 분단과 뒤이어 전쟁이라는 참극의 현대사의 결정적인 동아시아적 환경이 된다.

일본 패망후 한반도 분단선의 설정과 남한 단독정권수립의 강행이라는 미국의 선택은 그것 자체만으로는 한반도에서 적어도 반쪽만이라도 공산주의적 억압체계에서 구해낸 “대한민국 건국”의 이정표적인 결단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전개되는 한반도 전쟁은 북한 지도부의 군사적 모험주의로 치부하면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 지도부의 군사적 모험주

20) Warren I, Cohen, *America's Response to China: A History of Sino-American Relations*, Fourth Edi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0, p.165.

21) Cohen, pp.167-168.

의는 중국공산당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역사적 선택에 대한 오연한 거부를 통해 미국은 동아시아 전체에서 위로는 한반도 남쪽-류큐열도-대만-필리핀-동남아시아로 연결되는 미국의 해상패권 열도 라인과 아시아대륙 사이에,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의 동해안선을 따라, 동아시아 대분단의 선을 그었다. 그리고 그 대분단의 예각은 미국이 스스로 주도한 한반도의 분단선 획정과 뒤이은 단독정권수립이라는, 독립적인 것처럼 간주될 수도 있는 미국의 다른 선택들과 결합하여 한반도에 가장 처절한 역사적 결과를 예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말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의 역사적 선택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중국도 공산주의와 타협할 수 없는 미국의 역사적 선택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마찬가지로 아닌가라고. 그러나 필자가 말하는 중국의 역사적 선택은 자신들의 역사의 방향에 관한 선택이다. 중국이 부패한, 그리고 항일보다는 공산당 척결에 더 열심이었던 국민당을 버리고 공산당을 선택한 것은 중국인들의 민족자결에 속하는 문제이다. 미국이 민주적 자본주의질서를 선택하고 유지해오고 있는 것이 미국인들의 자결적 권리이듯이.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의 군사정치적 대립관계를 원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을 때, 미국은 그에 대한 외교적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중국인들의 자결적 권리에 속하는 정치사회질서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거부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또 말할 수 있다. 미국은 한반도 분단을 주도하고 또한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에서 참전을 통해 남한을 지켜냄으로써 반도의 남쪽만이라도 공산주의의 억압적 질서로부터 지켜내는 데 성공하였다고.

그 말에 두 가지를 먼저 말하고 싶다. 첫째, 당시 서양적 시각의 “민주주의”로부터 남한사회는 북한 못지않게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상황은 수십년간 남한에서도 지속되기에 이른다. 둘째, 한반도가 미국이 설정한 분단선에 의해서 분단되지 않았다면 그 대가는 공산주의 독재체제의 전한반도적 지배일 수밖에 없다는 시각은 전후 아시아 역사의 열린 가능성에 대한 닫힌 시각의 투영일 수 있다. 중국의 역사적 선택을 미국이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승인하여 직접적인 군사적 긴장상태를 선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한반도가 건국준비위원회와 항일무장세력들을 포함한 다양한 세력들 사이의 정치적 경쟁이 가능한 정치적 공간으로 남았을 경우 한반도의 정치사회적 미래는 어떻게 전개되었을 것인가. 물론 그것은 가설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지난 반세기만에 한반도의 남북한 사이에 그리고 남북한 내부에 전개되어 온 정치사회적 과정보다 한국 민족 전체의 “민주적 삶”에 더 부정적인 것이 되었을 것인가.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이러한 생각이 가설적이라면, 우리가 실제 살아온 현실역사의 코스가 “가능한 것의 최선”이었다는 오늘날 지배적인 인식 역시 가설적인 것이다. 그 역시 존재한 것과 존재하지 않았던 다른 가능한 것들 사이의 가설적인 비교에 근거하는 인식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역사적 선택에 대한 미국의 거부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 19세기 중엽이후 약 1세기에 걸쳐서 미국은 동아시아 제국주의 체계와 독립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의 불가분한 일부였다. 이 시기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의 본질은 다른 제국주의국가들과 함께 중국에 대해 공동지배체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있었다. 이 질서에서 미국은 시간이 갈수록 더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나가고 있었다. 동반 제국주의였던 일본에 의해서 그 전략에 중대한 침해를 당하기전까지 그러했다. 패권전쟁을 통해 일본의 도전을 좌절시킨 이후 미국 동아시아전략의 핵심에 또다시 도전해온 것은 이제 중국 역사 한가운데로부터 온 것, 즉 중국인들이 공산당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었다. 1세기에 걸친 자신의 중국지배전략의 붕괴 앞에서 미국은 새로운 역사적 현실에 평화적 적응을 하기보다 적대적 거부를 선택했던 것이다. 그 적대적 단절이라는 선택의 역사적 뿌리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그 역사적 뿌리 속에는 일본 제국주의와 한반도의 관계에도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미국의 제국주의적 거래가 담겨있는 것이다.

5. 동아시아 20세기의 제국주의와 미국,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1)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의 한국 내적 기원

해방 이후 한반도의 민주적 삶의 조건을 황폐화시킨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악화를 포함한 아시아적 냉전의 고착과 그 맥락에서 전개된 한국전쟁과 분단의 심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방이후 그 같은 조건의 거시적인 20세기적 배경의 또 한 가지 근본적인 사태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지배라는 점을 빠뜨릴 수는 없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사회의 전근대적 요소를 해체시키는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한반도 사회의 근대화에 공헌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만일 한국의 근대화가 일본 제국주의 지배와 직접적인 역사적 상속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분단과 전쟁과 그 이후 더욱 강고해진 분단체제 속에서 남한 사회가 수십년 동안 우익 파시즘에 가까운 정치질서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경험한 황폐한 삶, 그리고 한반도의 절반인 북한에서 오늘날까

지도 지속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피폐야말로 일본의 식민지배를 계기로 가속화된 근대화 양식과 무관한 것일 수 없다. 그 “근대화”의 경로는 최악의 것들 중의 하나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지배를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보다도 한말 조선의 극단적인 정치사회적 모순이었다. 일본이 명치유신이라는 위로부터의 혁명을 통해 제국주의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에 조선은 일본 시정무뢰배들에게 시해당한 후 이른바 명성황후로 추존되기에 이르는 민비와 그 척족세력이 국가를 사유화(私有化)한 가운데, 양반계층은 풍요를 향유했으나 일반민중은 국가를 사유화한 집단에 의한 가렴주구와 학정으로 피폐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았다. 양반층에 사유화된 국가는 가난하고 힘이 없었다. 토지가 중심이 된 국가의 부 대부분을 장악한 양반지주층에 대해 국가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양반층은 세금과 함께 부역과 군역도 면제받았으므로, 모든 짐은 농민층이 감당해야 했으며, 그만큼 국가는 가난하고 힘이 없을 수밖에 없었다.²²⁾ 국가가 사회적 통합능력을 결여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19세기 후반 조선의 이 같은 국가성격은 일본 제국주의 침탈의 중대한 ‘유인요인’이었다.

위로부터의 개혁 능력을 결여했던 조선말 국가는 결국 1894-5년 기간에 동학농민전쟁이라는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혁명 운동에 직면했다. 조선정권은 이를 억압하기에 자신의 무력이 부족함에 따라 청나라의 군대를 끌어들였고 또한 그 결과로 일본군대도 조선에 진출하였다.²³⁾

1894년 초 동학농민군의 1차 봉기 때 이미 조선정부는 청나라의 힘을 빌려 동학군을 진압하려 할 경우 일본군대의 파병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알면서 외세의 힘을 빌려 민란을 진압하려 함으로써 일본군대의 조선출병을 초래했다.

청나라에 이어 일본군대까지 조선에 출병함에 따라 외세에 의한 유린을 걱정한 동학군은 정부의 폐정개혁 약속을 믿고 화약(和約)을 맺었다. 그러나 정부의 개혁이 약속대로 시행되지 않

22) Bruce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New York: W. W. Norton, pp. 55.

23) 1894년 전라도 고부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이 각지에서 관병들을 격파하며 전주를 함락시킴에 따라 조선정부는 홍계훈을 양호초토사로 임명하여 진압을 시도한다. 홍계훈은 신식병기로 무장한 경군(京軍) 800여 명을 이끌고 서울을 떠나 인천에서 청나라의 원세개가 주선해준 북양해군 경비선과 상선에 분승하여 전주로 향한다. 그러나 그해 5월말 동학군의 공격을 받고 전주성을 포기한다. 홍계훈은 도망하여 5월 23일 정부에 상소를 올려 동학군 진압을 위해 임오군란 및 갑신변란 때와 같이 청조에 파병을 요청할 것을 건의한다.

홍계훈은 고종 및 민비와 그 척족세력의 신임이 가장 두터운 인물이었고 원세개 또한 평소 비호하는 인물이었다. 고종과 정부의 일부 신하들은 청조의 파병은 곧 일본의 파병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들어 처음엔 반대했다. 영돈영부사 김병시(金炳始)는 난민이라도 조선의 백성인데 타국의 군대를 빌어 이들을 토벌할 경우의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민씨 일파를 대표하는 병조판서 민영준 등 청병론 지지자들은 이미 원세개와 밀의하여 조선정부가 공식요청시 언제나 파병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6월 3일 마침내 조선정부는 원세개에게 청병 파병을 공식 요청한다. 김기혁, 『李鴻章과 淸日戰爭-외교적 배경의 고찰』, 김기혁 외 지음, 『청일전쟁의 재조명』,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43면.)

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1894년 9월 재봉기에 들어선다. 일본은 9월 18일 한국 관군을 도와서 농민군을 진압하고 싶다는 요청을 조선정부에 제시한다. 조선정부는 9월 21일 일본의 요청을 수락한다. “삼례에 있는 반란군이 이미 움직였다. 며칠 안 가서 장차 서울에 이를 것이다. 그 형세가 심히 흉악하고 서울이 고립무원이다. 믿는 것은 오로지 일본군뿐이다”라고 하면서 농민군 토벌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것이다.²⁴⁾

동학농민군은 조선관군과 일본군의 합동작전에 의해서 비로소 토멸될 수 있었다.²⁵⁾ 동학군의 토멸에 그치지 않고 척족세력의 수장적인 민비 자신이 일본 무뢰배들에게 시해당하는 참극을 자초하기에 이른다.²⁶⁾ 조선의 농민전쟁 지도자 전봉준은 일본군의 손에 넘겨져 그 주도하에 재판받고 처형당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임오군란과 동학농민운동의 한 가지 공통점은 민씨 척족세력에 의한 조선 국정의 파탄상태에 대한 분노이며, 그것은 분명한 한계를 가졌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원군의 정책에 대한 상대적 호의(好意)였다. 후에 가서는 농민군이 왕에게 직접 개혁실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발전하지만, 초기에는 대원군정권의 재정립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⁷⁾ 임오군란과 동학군이 적어도 초기에 다같이 대원군의 정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물론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의 성격 때문이었다. 특히 대원군 내정개혁의 핵심은 양반층에게도 조세를 부과하려는 데 있었다.²⁸⁾ 그러나 대원군의 개혁은 그의 몰락과 함께 좌절된다. 그의 내정개혁의 좌절은 또한 사대주의 외교의 부활과 맥을 같이 하며 전개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의 개혁정치의 등장과 몰락의 맥락을 돌이켜보게

24) 鄭昌烈, 「한말 개혁운동의 정치/경제적 성격」, 송건호/강만길 편, 『한국민족주의론 I』, 창작과 비평사, 1982, 53면.

25) 일본군이 주도한 동학 농민군 소탕전에서 일본군은 수천의 동학 농민군을 살상하였다. 柳永益, 『韓國近現代史論』, 일조각, 1992, 52면.

1882년 임오군란 때에도 일본은 조선해안에 군함을 파견하여 대원군을 지지하던 조선의 배외운동을 진압하는 청나라 군대를 지원하는 입장에 있었다. (柳永益, 52면.)

26) 1864년 집권한 대원군이 실각한 1873년 민비가 정권을 장악했으며, 이후 민경호 등을 비롯한 민씨 척족이 국정을 농단했다. 1882년의 임오군란에서 그 분노의 표적은 민경호 등 민씨 척족과 민비였다. 민비는 이 사태로 잠시 실권을 하지만 군란의 평정과 함께 곧 복권되고 민씨 척족 또한 권력을 유지하게 된다. 민비의 비극을 서사적으로 엮은 오페라 『명성황후』는 초기에는 임오군란이 배경으로 등장하지만, 곧 그 부분을 삭제해버린다. 언론에서는 그 이유를 “극적 재미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씨 집권파와 일본의 갈등을 과장해 부각시키고 반면에 임오군란에서도 표출된 바와 같은 민중과 민비를 정점으로 한 조선 내의 갈등을 은폐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라고 판단되며, 그런 점에서 이 오페라에서 임오군란 부분을 삭제한 것은 상징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27) 정창열, 53면.

28) Cumings, p.108. 대원군의 개혁이 그 같은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일본 메이지유신과 달리 구태의연한 전통적 방식이었던 점에 대한 커밍스의 지적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Cumings, p.108.

된다. 광해군이 임진왜란이라는 외세에 의한 유린을 되풀이당하지 않고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추구했던 내정개혁의 핵심은 땅을 가진 양반지주층에게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농민을 주대상으로 인두세를 부과하던 제도를 개혁하여 주로 양반지주들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대동법의 시행이었다. 그리고 것처럼 사회지배층에게 조세와 군역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강한 국가(strong state: 사회의 자원을 장악한 지배집단에게 조세와 군역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외 중립외교를 펼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의 양반 기득권세력은 인조반정을 통해 광해군을 추방하고 그가 추구한 대동법 같은 조세개혁정치와 중립외교를 폐기한다. 조선은 다시 양반 기득권층의 조세 및 군역으로부터의 면제라는 약한 국가(weak state)로 돌아가 그에 걸맞게 사대주의 외교를 펼치게 된다. 명나라에 대한 사대외교는 신흥세력인 금나라의 분노를 사고 곧 두 번에 걸친 중국의 조선침략의 배경이 되고 만다.

16세기 전반 중국의 침략과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침탈이 각각 광해군과 대원군의 내정개혁 실패와 함께 사대주의 세력의 발호 가운데에서 전개되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반정을 주도한 세력이 그의 중립외교노선을 폐기하고 당시 말기증상을 보이고 있던 명나라에 일방적으로 기대는 사대외교로 일관함에 따라 대립관계에 있던 금나라의 분노를 자초하여 그 침략을 불러들였다면, 조선 말 대원군을 몰아내고 집권한 민씨 척족 세력은 역시 덩치만 클 뿐 열강의 반식민지상태에 처한 청나라 군대에게 사사건건 기대는 사대외교를 벌임으로써 그와 대립관계에 있던 일본의 경쟁적인 군사개입을 자초하고 마침내 그 식민지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두 역사적 사건의 양상에는 지극히 닮은 데가 있는 것이다.

(2) 한반도 식민지화의 국제적 기원: 세력균형 파괴와 제국주의 체계

19세기 말 조선의 이 같은 정치사회 내적 문제를 떠나서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지배는 물론 그 시대 세계질서와 그 안에서의 제국주의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국주의의 시대였던 19세기 말 20세기 초라는 세기적 전환점에서 문제는 다시 한반도 주변의 세력균형이 파괴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에 대부분의 논의가 집중해온 바와 같이 일본이라는 한 나라, 한반도에 이웃한 한 나라의 제국주의가 아니라, 당시 전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던 제국주의의 움직임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와 관련해서 그 제국주의 사이에 전개되고 있던 거래와 그로 인한 한반도 주변의 제국주의적 내부 균형 파괴라는 사태이다. 이 두 가지가 20세기 한반도에서의 민주적 삶의 조건 여하를 결정할 요소의 하나로서 20세기 초

국제환경을 이해하는 데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두 가지 포인트들은 서세동점의 19세기 후반에서 미국이 일본과 정면충돌하는 태평양에서의 패권전쟁에 돌입하기까지의 기간을 크게 네 개의 국면으로 나누어봄으로써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국면은 영국을 필두로 한 서구열강과 미국이 중국을 반식민지화함으로써 '동아시아 균형 파괴'를 초래하여 일본 제국주가 발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시기다. 두 번째 국면은 제정러시아가 활발한 동아시아진출 정책을 펴자, 영국과 미국이 지리적으로 중국에 가까운 러시아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사태를 경계하기 위해 강력한 러시아견제정책을 펴면서, 이를 위해 일본 제국주의와 동맹을 맺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지배를 인정하고 국제적으로 승인하여주는 단계이다. 이 두 단계에서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는 완성되고 세계 제국주의 질서에서 국제적 승인을 받는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주축으로 참여한 가운데 구축되고 작동하던 제국주의 체제의 세 번째 국면은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 조성된 새로운 동아시아질서이다. 이 시기에 미국과 영국의 관심의 초점은 러시아혁명이 이미 권력공백상태에 빠져 있는 중국대륙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1차 대전에서 영국과 미국은 일본과 사실상의 동맹관계에 있었으나, 러시아혁명이란 사태에 처하게 되자 프랑스와 함께 일본의 지속적인 만주진출기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밀월을 지속한다. 러시아혁명의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마지막 네 번째 국면은 1930년대 초 일본이 만주국을 세워 만주지배를 공식화하고 더 나아가 중국대륙 심장부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하는 시기에 시작된다. 이 시기 일본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하되 중국에 대해서는 일본에 의한 일방지배가 아닌 미국/영국이 참여하는 개방적인 공동지배"라는 미국 주축의 동아시아 제국주의 체제 안의 핵심적인 거래의 원칙을 범한다. 이 때 비로소 세계 제국주의 질서 안에서 미국/영국과 일본 사이의 균열이 시작되며 태평양전쟁이라는 패권전쟁으로 발전하였다.

먼저 제1단계의 국면을 보자. 1500년에서 1850년경까지 동양과 서양의 관계는 '공생 기간'이라고 불린다. 약 450년 동안 동양과 여러 서양사회는 정규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왔으며, 그 접촉의 기초는 무역이었다. 처음 350년 동안 동서양의 무역관계는 동양이 서양보다 고도한 문명을 이룩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동아시아지역에서 이 지역의 완성품들을 구입해가는 쪽이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서양의 금이 동양으로 흘러들어가는 형세였다.

이러한 상황은 서양에서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종식되었다. 이제 값싸게 기계로 대량생산된 더 높은 질의 상품들이 동양에서 온 사치품들을 대체해 서양사회의 시장들을 석권했다. 그리고 그 넘쳐나는 서양 상품은 그 이상의 잠재적 소비시장인 동양을 향해 강한 진출의 압력을 받게

되었다.²⁹⁾

근대 초기 서방의 아시아 진출 추진력은 엄청난 규모로 생각된 중국의 잠재적 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꿈이었다. 당시 4억에 달하는 중국인구가 그 근거였다. 그러나 18세기 말,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그러한 서양의 꿈은 실현되지 못했다. 아직은 중국의 차, 대황(大黃), 도자기 등에 대한 서양의 수입액이 가죽, 면, 인삼 등의 중국으로의 수출액을 훨씬 웃돌았다. 중국의 유교와 관료제도와 함께 중국의 전반적인 빈곤도 서양의 대중국 무역을 적자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중국의 전통적인 무역 관행이 조공무역으로서 서방의 자유무역 관행과 달랐던 것도 한 요인이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역불균형문제를 그들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술책이 아편무역이었다. 1834년까지 영국의 대중국무역을 독점했던 동인도회사가 아편 밀무역을 먼저 시작했다. 그러자 미국 무역회사들과 다른 외국회사들도 함께 아편 밀무역에 뛰어들었다. 거의 대부분의 미국 회사들이 중국에 대한 아편 밀무역에 가담했다. 이 아편시장의 3분의 1을 미국이 차지했다.³⁰⁾

1839년 중국정부가 임칙서(林則徐: Lin Tse-hsu)를 광둥에 보내 아편밀무역을 차단하려 했다. 이에 서방국가들이 반발하여 아편전쟁(1839-1842)이 일어났다. 1842년의 난징조약에서 중국은 영국에 5개 항구를 개방하고 영국인 거주지구를 설치하며, 홍콩섬을 영구할양하고 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제한하며, 2천1백만 멕시코 달러를 전쟁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했다. 1843년에 추가로 맺은 조약에서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status)를 약속 받았다. 중국이 다른 나라에 더 좋은 조건의 무역조약을 체결하면 영국은 자동적으로 그 같은 대우를 보장받기로 한 것이었다.

미국 역시 다른 서방열강들과 마찬가지로 1840년대와 1850년대에 중국과 조약을 맺어 영국이 얻은 조건들을 확보해냈다. 1843년 7월 3일 미국은 왕샤조약을 통해 영국이 얻어낸 것에 덧붙여 치외법권을 중국으로부터 받아냈다. 치외법권(extraterritoriality)이란 미국인들이 중국에서 죄를 범했을 때 미국법정이 그 재판권을 갖는 것을 말했다. 1850년대에 미국은 또한 중국과의 협약을 통해 아편무역의 합법화를 얻어냈다. 미국상인과 선교사집단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의 해군함대가 중국의 해안을 순찰하게 되었다.³¹⁾

29) C.S. Burchill, "The United States in Asia: A Century of Manipulation," Neal D. Houghton, ed., *Struggle Against History: U.S. Foreign Policy in an Age of Revolution*, New York: Simon & Schuster, 1968, pp.184-185.

30) William R. Nester, *Power across the Pacific: A Diplomatic History of American Relations with Japan*, London: Macmillan Press, 1996, p.17.

31) Nester, pp.16-17.

이것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자신의 아시아정책은 유럽열강들과 달리 제국주의와는 거리가 먼 “깨끗한 기록”(clean record)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 준다. 미국은 자신의 깨끗한 기록의 예로서 1900년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자유무역과 자유투자를 포함한 [문호개방]을 요구했으며, 1915년 일본이 중국에 요구한 21개항을 비난했다는 것, 그리고 1차대전 말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일본을 산둥반도에서 철수시키려 노력한 것, 1922년 일본과 다른 7개 나라들을 설득하여 9개국 조약(Nine Power Treaty)을 맺어 중국의 영토적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했다는 점, 또 일본이 1931년 만주에 침입했을 때 미국은 그 행동을 비난하고 일본의 정복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점을 든다.

그러나 미국은 19세기에 자신이 중국에 강요해 맺은 불평등조약들을 폐기하려 하지 않았다. 미국의 함대와 해병대가 중국에 계속 남아서 치외법권을 강제하는 데 계속 동원되고 있었다. 미국은 또한 다른 열강들과 협동하여 중국의 해상관세청(Maritime Customs)에 대한 통제를 유지했다. 또 중국에 대한 일본의 여러 가지 위협적 행동에 대해서도 미국은 그에 대한 선언적 비판 이외에 어떤 행동도 고려하지 않았다.³²⁾

대체로 19세기 중엽에서 말엽에 이르기까지가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의 제1기인데, 이 때는 전 세계 제국주의국가들이 중국대륙의 반식민지화를 위해 경쟁하고 협동하는 시기였다. 말하자면 칼 카우츠키가 말한, 제국주의 열강들이 공동의 제국주의적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초제국주의(ultra-imperialism 또는 superimperialism)의 아시아판이었다. 그러한 제국주의적 경쟁에서 미국은 영국을 비롯한 다른 제국주의열강이 중국을 침탈한 전리품을 구경하다 나눠 받는 수동적인 역할에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인들의 눈에 파악된 중국외교사적 인식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수많은 특권을 강탈하고 중국인들의 자강운동이나 혁명운동을 억압하여 그 특권을 보호하고 확대시키려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열강의 역량을 규합하는 ‘합작정책’(合作政策)을 조직한 당사자였다. 이 외교사 서술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1862년 3월과 1863년 6월에 걸쳐 미국무장관 시워드 시의 지시에 따라 주중국 미국대사 버링검이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공사들과 협의를 통해 이끌어낸 합의를 들고 있다.

이 협의가 담고 있는 합작정책의 요지는 첫째, 청국 정부에 대한 지지, 둘째, 중국에서 열강들이 갖고 있는 특권의 보호, 셋째, 중국에 대한 공동관리에 있어 열강 각국이 갖고 있는 현재의 위치를 유지한다는 것이었다.³³⁾ 당시 미국은 남북 내전으로 경황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중국에서

32) Jonathan G. Utey, *Going to War with Japan, 1937-1941*, Knoxville: Th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1985, pp.4-5.

33) 王紹坊 지음, 한인희 옮김, 『中國外交史, 1840-1911』, 知永社, 1996, 160면.

제국주의적 공동 지배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을 분할해 지배하려는 제국주의 열강의 군사적 움직임이 활발해지던 19세기 말(세기의 전환점인 1900년) 제국주의의 중국침탈 강화에 저항해 의화단의 봉기가 발생한다. 미국은 다른 열강들과 함께 진압군을 보낸다.

당시 영국 등 다른 열강에 비해 미국은 중국에 파견한 군대가 수적으로 열세였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문호개방정책을 내세우며 각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분할점령하는 사태는 반대했다. 하지만 미국 역시 중국에 대한 영토적 특권 획득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1900년 12월 7일, 미국무장관 헤이가 주일본 미국대사 파크스에게 보낸 훈령이 그 한 예이다. 이 훈령은 “미해군이 북주 북쪽의 삼사만(三沙灣)을 연료저장소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히고 일본정부가 이에 동의해줄 것인지를 파악하라는 지시였다. “미국의 이러한 중국 영토 점령 음모는 일본의 반대로 끝내 실행되지 못하였다”고 왕소방은 서술하고 있다.³⁴⁾

이 시기 동아시아 제국주의 체계의 한 주축으로서 미국이 수행한 또 하나의 색다른 역할에 주목할 필요를 느낀다. 그것은 제국주의 통상외교의 고전적 표현인 포함외교(gunboat diplomacy)였으며, 그 결과가 20세기 동아시아 질서에 미치는 의미심장한 결과이다. 1852년 3월 미국 대통령은 매튜 페리(Matthew Perry)에게 일본원정을 지시한다. 페리는 두 척의 증기 순양함, 네 척의 전함, 세척의 보급선으로 구성된 함대를 이끌고 출정했는데, 이것은 미국 해군의 4분의 1을 점하는 것이었다.³⁵⁾ 1854년 3월 요코하마에서 페리는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의 쇼군의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시작한다. 곧 위협적인 포함외교를 전개한다.³⁶⁾ 마침내 그해 3월 31일 가나가와조약(Treaty of Kanagawa)을 체결한다. 이것은 다른 열강에 대한 일본의 개방의 신호탄이기도 했다. 1954년 10월 영국이, 그리고 그 다음해 2월 러시아가 일본과 유사한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된다.³⁷⁾

미국은 중국의 반식민지화를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경쟁과 협력의 체계의 한가운데에 있었을

34) 王紹坊, 390면.

35) Nester, pp. 26-27.

36) Nester, p. 35.

37) 미국의 그러한 행동양식은 그로부터 12년 후인 1866년 제너럴 셔먼호(General Sherman) 사건, 1868년 오페르트-젠킨스(Oppert-Jenkins)에 의한 南延君墓 盜掘미수사건, 1871년의 신미양요 등으로 한반도에도 연장된다. 다만 그 시기 조선은 대원군집정기(1864-1873년)였다. 미국 및 미국인의 거친 침략적 행태는 대원군 시기 조선의 쇄국정책과 관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으며, 그 결과 조선과 미국간의 통상관계로 이어지지 않았다. 민비의 세력이 집권한지 3년만인 1876년 미국에서 배운 일본이 군함을 이끌고 와 조선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고, 이에 다시 자극받은 미국이 1880년 일본의 중개로 조선과의 통상교섭을 구하나 일본의 무성의 등을 이유로 실패한다. 그러던 중 1882년 청나라 이홍장의 중개를 청하여 조선과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을 체결한다. 柳永益, 5-11면.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군국주의적 제국주의 체제 정립의 계기를 지극히 고전적인 제국주의적 외교 방식을 동원해 마련하게 된다. 메이지유신이라는, 미국이 일본의 위로부터의 혁명을 촉발한 방식은 미국이 중국을 반식민지화하는 제국주의적 작업에 개입하는 방식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두 가지 방향의 미국 작업은 한반도의 운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동아시아 균형파괴’라는 한 동전의 양면이었다고 할 것이다.

제1기를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은 다른 열강들과 함께 중국의 반식민지화를 추구하고 달성한 제국주의질서의 한 주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동아시아질서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다. 만주를 포함한 중국대륙에 광활한 권력공백이 강요된 것을 의미했으며, 그것은 한반도의 운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한반도 주변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의 세력균형의 파괴였다.

사람들은 말할 수 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일본은 이미 자신의 능력으로 청나라를 쓰러뜨릴 수 있었으며,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는 이미 그때 결정된 것이었다고. 그리고 청일전쟁에서의 승리로 일본이 중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강요할 수 있었으나, 미국은 그것을 막은 세력이었다고.³⁸⁾

이에 대해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청일전쟁의 결과 자체가 그 이전 반세기에 걸쳐서 대중국 아편무역의 3분의 1을 미국이 장악할 정도로 미국이 깊이 개입한 가운데 진행되어온 중국 반식민지화의 결과이다.

둘째,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는 물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우월적 지위로 직결되는 것이지만, 전쟁의 전리품으로 일본이 추구한 조선의 식민지화에 대한 국제적 승인을 앞장서 부여한 미국과 영국의 행위는 지극히 제국주의적인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미국이 일본과 함께 19세기 및 20세기 전반 동아시아에 구축한 일종의 초제국주의 체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셋째, 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 정부는 1895년 4월 17일 일본과 대만을 포함한 많은 영토를 할양하는 굴욕적인 마관조약(馬關條約)에 서명한다. 이 조약을 황제가 비준하도록 강요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세 나라가 개입하는 이른바 [3국간섭]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 간섭의 당사자들은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었다.

영국은 불간섭을 선언했다. 영국의 [더타임즈(The Times)]는 영국이 불간섭 결정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본의 편을 들어준 이유를 이렇게 해설했다: “영국의 이익은 이 항복의 규정(일본에 대한 영토 할양)에 의하여 어떠한 위협도 없을 뿐 아니라 조약의 다른 규정들로 인해 영국의

38) 사실과 다름에도 사람들의 인식에는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이미지가 박혀있는 경우가 많다.

이익은 오히려 촉진되게 될 것이다.”³⁹⁾

미국은 일본을 편들에 있어 영국보다 한결음 더 나아갔다. 미국정부는 주중국 미국공사에게 훈령을 내려 청나라정부를 압박해 마관조약을 신속하게 비준할 것을 촉구하게 했다. 또한 당시 미국 국무장관을 역임한 인물이었던 존 포스터(John Foster)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나라 총리아문을 위협하는 태도로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만일 황제가 비준을 거부하면 그는 문명세계 앞에 체면을 잃게 될 것이다. 군기대신도 황제의 체면을 세워주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 중국황제는 마관조약을 비준하였다.⁴⁰⁾

(3) 중국 공동 지배를 위한 제국주의 거래와 한반도

미국이 주축에 포함된 동아시아 제국주의 체제의 제2기는 1890년대 말부터 1차대전 기간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 미국은 영국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진출을 막는다는 구체적 목표를 앞세우며 일본과 실질적인 동맹관계를 추구하였다.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위해 조선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지원하였다. 러시아의 진출로부터 미국과 영국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중국이었다. 화북을 포함한 중국대륙에 대한 러시아의 진출이 중국에 대한 영국과 미국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일본과 동맹을 맺고 화북에 대한 러시아의 진출을 차단하는 역할을 일본에 기대한 것이었다. 미국과 영국의 이 같은 전략적 판단에서 조선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지배의 대상으로 인정해줄 하나의 제물이었다.

1902년 영국은 일본과 ‘영일동맹’을 맺었으며, 영국과 특수관계였던 미국은 이를 통해 일본과 사실상의 동맹관계를 맺은 것이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확정되기도 전인 1905년 7월, 미국정부는 육군장관 윌리엄 태프트를 동경에 파견해 일본수상 가쓰라 다로오(桂太郎)와 회담을 갖고 필리핀에 대한 자신의 지배권과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상호 인정하는 밀약을 일본과 체결했다. 태프트-카쓰라 밀약이다. 비망록(메모렌덤)형식으로 된 이 밀약은 “조선이 일본의 동의 없이는 어떤 대외조약도 맺을 수 없도록 의무화할 정도로 조선에 대해 일본군(日本軍)이 감독체제를 확립하는 것(the establishment by Japanese troops of a suzerainty over Korea)은 현재의 전쟁(러일전쟁)의 논리적 결과이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동양의 영구적인 평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로 태프트장관이 말했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런 측

39) 王紹坊, 301면.

40) 王紹坊, 303면.

면에서 그의 견해에 동의하리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⁴¹⁾ 이 밀약과 함께 미국은 1882년 조미조약(朝美條約)을 맺고 정식외교관계를 가져온 조선에 대한 외교승인을 철회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의 조선지배 강화 움직임은 본격화되어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이 장악하는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은 1908년 11월 다시 일본에게 조선에 대한 지배권 인정을 재확인하여 주는 협약을 일본과 체결한다. 루트-타카히라 협정(Root-Takahira Agreement)이 그것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문호개방정책에 일본이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였다. 미국은 1905년의 태프트-카쓰라 밀약에서 자국의 중국 문호개방정책에 대한 일본의 협조를 대가로 일본의 조선지배권에 대한 국제적 승인을 부여했으나,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일본의 중국정책이 문호개방정책 협조에 대한 약속을 교묘하게 유린한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이에 미국은 루트-타카히라 협정을 통해서, 대중국 문호개방정책에 대한 일본의 협력을 다시 한 번 확인받고 그 대가로 일본이 조선을 병합할 권리와 만주에서 일본의 특수지위(Japan's right to annex Korea and its special position in Manchuria)를 인정해주었던 것이다.⁴²⁾ 그로부터 2년 후 일본이 조선을 강제병합하기에 이른 것은 당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제국주의 운동의 움직임으로 보아 지극히 자연스런 귀결이었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제2기의 미국은 반식민지화된 중국에서 이미 확보한 제국주의적인 공동지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를 인정하는 ‘거래’를 한 것이었다. 최문형과 유영익의 연구는 당시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에 대해 간명하게 정곡을 찌르고 있다: “미국은 만주를 자국의 진출목표로 설정하고 이 지역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우세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으며, 일본강화의 한 수단으로서 조선을 일본에게 넘겨주었다.”⁴³⁾

41) www.usd.edu, (University of South Dakota).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패전을 거듭했으나, 일본 역시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했던 1905년 봄 독일, 미국, 영국의 압력으로 러시아와 일본은 평화협상을 미국 포츠머스에서 시작했다. 이 협상은 그해 9월 5일 타결되어 포츠머스조약(Treaty of Portsmouth)이 성립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은 만주에 대한 경영권을 두고 일본과 타협을 하게 된다. 영일동맹 등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고 일본의 입장을 지원해온 영국과 일본으로서는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다고 믿었을 터이다. 미국과 영국이 일본과 그 같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프트-카쓰라 밀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만주에 대해서 일본의 독점적 지위를 부정하는 대신에 조선을 일본에 넘겨주는 것이었다. 영국 역시 이 협상과정에서 일본과의 동맹을 더욱 확대하여 동아시아 전체에 영일 동맹조약을 적용하고 그 대가로 영국 역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Japan's free hand in Korea)을 인정해주었다.

42) www.britannica.com.

43) 崔文衡, 『列強의 東아시아政策』, 一潮閣, 1979, 159-165면; 柳永益, 『韓國近現代史論』, 一潮閣, 1992, 22면. 유영익은 태프트-카쓰라밀약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 설정(宗主權設定)’을 용인함으로써 “조선왕조의 멸망을 재촉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유영익, 22-23면. 이같은 미국의 정책은 당시 테오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 자신이 1903년 5월 부터 동아시아문제를 직접 관장하면서 미국정부의 확고한 정책으로 굳어져갔던 것이라고 유영익은 또한 지적하고 있다.

(4) 워싱턴회담체제: 동아시아의 신성동맹(神聖同盟)

한편 제3기는 1차대전 중이었던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혁명과 함께 시작된다. 1917년 2월 러시아에서 멘세비키혁명으로 제정러시아가 붕괴하면서 독일의 승리는 굳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미국이 전쟁에 나선 것은 이러한 급박한 사태발전에 따른 것이었다. 미국은 독일의 유럽정복의 꿈을 좌절시키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유라시아대륙에는 1917년 10월 혁명의 성공으로 전혀 다른 성격의 정치질서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러시아대륙에 그치지 않았다.

러시아혁명의 성공을 결정적인 계기로 출범한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지도자로서 5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미국 반공주의 권력의 한 축으로서 군림한 존 에드가 후버에 관한 한 정치전기(政治傳記)는 1919-20년 시기 세계의 중심을 자처하는 유럽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1919년이라는 해는 이탈리아 좌파가 ‘적색 혁명 시대’ (Red Years)라고 불렀던 시기의 첫 해였다. 공산주의 혁명은 러시아의 경계를 넘어 중부유럽 전체에 걸쳐 정부들을 쓰러뜨리고 부귀한 자들과 권력 있는 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그러나 공산주의혁명은 탄력적이고 무자비한 보수주의 세력에 의해서 역공에 부딪친다. 1920년 말 경에는 혁명은 당분간 러시아에 한정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은 러시아의 정책수단으로 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에드가 후버가 급진주의에 대한 전쟁을 시작했던 시기인 1919-20년 경의 시점에서 전세계적 혁명은 가능할 뿐 아니라 임박한 것처럼 보였다.”⁴⁴⁾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추가된 것이었다. 그것은 물론 아시아에서 일본 제국주의와 미국/영국의 밀월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핵심은 러시아에게 동아시아에서의 어떠한 역할도 허용하지 않는 가운데,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가 중국에 대한 공동지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1차대전 승리에서 지도적인 역할로 세계적인 지도자로 부상한 미국이 주도하여 1921-22년 시기에 동아시아에 확립한 워싱턴회담체제로 나타난 이 질서는 중동에서 시작해 인도와 인도차이나, 필리핀을 거쳐 조선에 이르는 광활한 영역의 아시아에 그들 네 나라가 저마다 차지하고 있는 기존의 식민지들에 대한 기득권을 상호인정하고 보존하는 것을 전제했다.⁴⁵⁾

1차대전의 종결과 함께 전후처리의 원칙으로 우드로 윌슨 미국대통령은 민족자결(national self-determination)의 원칙을 내세웠다. 미국이 아메리카대륙 내부의 팽창에 여념이 없던 19세

44) Richard Gid Powers, *Secrecy and Power: The Life of J. Edgar Hoover*, New York: The Free Press, p.56.

45) Herbert P. Bix, *Hirohito and the Making of Modern Japan*, New York: Perennial, 2001, pp.146-150.

기에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 제국주의국가들에 의하여 이미 분할이 완료된 세계에서 단힌 식민 제국들의 문호개방을 주장하고 그것을 민족자결이라는 보편적 이념으로 제시하는 것은 미국 자신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에 걸쳐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의 식민지들에게 민족자결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았다. 그것은 유럽에 한정되는 것이었다.⁴⁶⁾ 독일과 러시아의 중간에 위치한 중동부 유럽 지역의 소수민족들이 독립하여 독일과 러시아의 팽창을 견제하는 효과를 미국과 영국은 기대했던 것이다.

또한 세계사의 모순이 제국주의국가들 내부의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식민지민족간의 모순으로 옮겨갔으며, 세계혁명의 열쇠는 전지구적인 식민지민족해방에 있다고 선포한 레닌주의와 그에 기초한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은 자본주의세계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러시아혁명과 이데올로기 경쟁을 하기 위해 유럽에 적용함으로써 당장 유럽에서 러시아와 독일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민족자결의 이데올로기적 수사를 아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미국이 영국 및 프랑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와 함께 아시아를 공동경영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던 1920년대에 민족자결주의의 보편적 적용은 미국의 선택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⁴⁷⁾

1919년은 부분적으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선언에도 자극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조선의 3.1운동과 중국의 5.4운동이 전개된 시기였다.⁴⁸⁾ 그러나 그 시기 일본 제국주의와 영국/프랑스/미국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는 영국 국왕의 동생인 코너트 공작(duke of Connaught)이 1918년 일본 황실을 방문하고, 당시 일본의 황태자 신분이었던 히로히토(1928년에 천황 즉위)가 1921년 영국 왕실의 초청으로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을 공식방문한 사실에서 여실히 드러난다.⁴⁹⁾ 히로히토는 미국도 방문할 수 있었으나, 그의 품성으로 보아 일본과 미국 사이의 국민감정의 차이로

46) Mansour Farhang, *U.S. Imperialism: From the Spanish-American War to the Iranian Revolution*, Boston: South End Press, p.97.

47) 미국은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 쿠바와 함께 하와이, 필리핀을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후 식민지 필리핀에서 일반 민중에 대한 식민지적 착취는 네덜란드 식민지 이스트 인디스(East Indies), 영국 식민지 말레이시아, 일본의 식민지 조선에서와 마찬가지로 패턴을 보였다. 식민지무역상과 투자자들, 그리고 식민지정부에 협조하는 엘리트층은 혜택을 보았다. 그러나 필리핀인의 절대 다수에게 미국의 식민주의 지배는 경제적 재난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식민지 조선에서와 마찬가지로 1930년대에 증폭되는 농민들의 저항에서도 드러난다. Walden Bello, *People & Power in the Pacific: The Struggle for the Post-Cold War Order*, London: Pluto Press, 1992, p.39.

48) 중국의 5.4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보다는 러시아혁명사상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1차 대전 이후 전세계 식민지 및 반식민지들에서 반제민족해방운동의 사상적 촉매제는 러시아혁명의 이념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같은 제국주의의 본류와 동맹관계에 있던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유럽 이외의 약소민족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49) Bix, pp.103-122.

발생할 수 있는 미묘한 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문기자들을 포함한 미국인 일반인들의 거친 행실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품위 있게 넘길 수 있을지를 일본 황실 참모들이 염려하여 취소했다.⁵⁰⁾

워싱턴회담체제는 프랑스혁명 이후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파도를 몰고온 나폴레옹 세력을 무너뜨리고 영국/프러시아/러시아가 주도하여 19세기 초에 구축한 비엔나체제, 이른바 '신성동맹' 체제의 20세기형 동아시아판이었다. 비엔나체제가 19세기 유럽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적으로 삼았다면, 20세기 전반 동아시아 워싱턴회담체제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공동의 적으로 삼았다는 것이 공통점이자 차이점이라고 할 것이다.

(5) 일본의 도전과 패권전쟁, 그리고 중국 역사 안으로부터의 도전

제4기는 1930년대의 시작과 함께 열린다. 일본이 워싱턴회담체제의 전제인 중국에 대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4국에 의한 공동지배의 원칙을 깨뜨리고 만주에 대한 일방적인 독점지배를 공식화하는 만주국을 수립하고 베이징 이북의 화북지방, 그리고 나아가 상하이와 남경을 포함하는 중국대륙 심장부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함에 따라, 미국과 일본은 긴장과 갈등관계에 접어들고 마침내 동아태지역에서의 패권전쟁에 돌입하게 된 것이었다.

제4기에 이처럼 미국은 일본과 전쟁으로까지 나아가지만, 아시아에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신성동맹 전선은 다른 한편으로 유지하게 된다. 그것은 중국에서 전개되는 내전에 대한 개입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장개석정권은 정권의 정통성을 항일민족주의에 두고 출발하였으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시킨 새로운 정치사회 이념체계에 기초한 새로운 급진세력인 공산당이 중국 내부에서 급성장함에 따라 장개석 국민당정권의 일차적 목표는 항일보다는 공산당 파괴에 두어졌다. 일본 제국주의와 갈등관계에 들어간 미국에게 중대한 숙제는 국공합작(國共合作)을 통해 효율적인 항일전선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미국에게 있어 국공합작 추진은 국민당이 주도하는 중국의 정치질서를 전제하는 것이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중국에서 국민당의 상대적인 정치적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파당적인 정치개입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파당적 정치개입은 중국에서 공산당으로 표상되는 급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이 공고해질수록, 그 힘이 중국 인민에게 역사적인 선택으로 굳어갈수록, 더욱 심화되어갔다.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지배가 불가능한 조건에서 적어도 공동지배체제-즉 중국의 문호개방 유

50) Bix, p. 106.

지-를 지켜내는 것이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의 본질이었다고 할 때, 일본 제국주의의 중국침략은 중국에 대한 보수적인 신성동맹적 지배질서에 대한 밖으로부터의 도전이었다. 일본의 패망은 그 질서에 대한 일본의 외적 도전을 미국이 전쟁의 희생을 치르며 분쇄한 것을 뜻했다. 그러나 이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신성동맹적 지배체제에 대해 안으로부터 더 근본적인 도전이 가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공산주의 세력에 쫓겨 중국대륙에서 밀려나 대만으로 도주한 장개석정권에 대해 마지막까지 집착하며 끝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외교적 승인을 거부하고 만 미국의 선택은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었다 할 것이다.

미국 행정부 내부의 중국전문가들은 중국대륙의 공산화를 역사의 심판, 역사의 선택으로 받아들였다. 트루먼행정부가 1950년 초 공개한 『중국백서』는 그러한 인식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중국현대사를 밀착해 지켜본 일부 전문가들의 역사적 통찰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신성동맹적 지배체제라는 전략적 프리즘을 통해 아시아와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미래를 바라보아 온 미국의 광의의 권력집단의 정치, 사회, 이데올로기적 지평은 중국의 역사적 선택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미 미국의 것이었던 중국을 뜻하지 않게 낯설은 이질적 세력에게 “상실한 것, 빼앗긴 것”(China was lost to the Communists)이 되었던 것이다.

6. 냉전과 ‘자유선거,’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독일과 일본의 군사정치적 도전이 패퇴한 1945년 여름 세계에는 두 개의 신념체계가 인류사회에서 보편적인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정통성 있는 정치사회이념으로 정립되어 있었다. 미국식의 자유민주주의와 소련이 대표하는 사회주의가 그것이었다. 그 두 이데올로기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파시즘을 무너뜨리기 위해 연합전선을 폈으나, 이제 전후질서에서 본격적인 경쟁관계로 돌입했다.

1989년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두고 후관시스 후쿠야마는 사회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최종적 승리, 즉 ‘역사의 끝’을 표상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1945년의 시점에서 전개되기 시작한 새로운 전지구적 이데올로기경쟁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주의에 대해 본질적으로 우월한 정신적 지위를 차지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승전연합국은 파시즘을 격퇴하는 데 있어 소련과 함께 결정적인 힘이었으나, 자유민주주의는 근본적인 약점을 또한 피할 수 없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들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본류였기 때문이었

다.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즉 특권적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라는 사유가 광범하게 존재했던 것은 단순히 맑스주의 사상의 영향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유민주주의가 제국주의적 지배와 현실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세계질서의 모순과 불가분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를 지배하고 중국에서도 그 세력이 확장되고 있던 사회주의는 제국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이념체계라는 사실에서 당시의 이념경쟁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았다. 사회주의는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식민지사회의 특권층을 제외한 절대대수의 계층에게 더 강력한 호소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경쟁의 지형은 전후 영국과 프랑스 등이 전쟁 중에 붕괴되었던 식민지 지배질서를 재구축하려 하고, 인도차이나의 경우에서 여실히 표현된 것처럼 미국이 이를 지원하고 나섬에 따라서 인도차이나를 포함한 민족들에게서 더욱 강화되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제국주의의 동의어화(同意語化) 현상은 그만큼 불식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계급적 특권을 보호하면서도 개인의 자유와 나라 전체의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였던 미국을 비롯한 선진 제국주의국가들의 자유민주주의는 식민지질서에 잘 적응해온 제3세계의 상층부 지배엘리트들에게는 열망의 대상이었다.

이것은 식민지사회의 미래상을 둘러싸고 형성된 깊은 사회적 분열을 의미했다. 식민지질서에서 이른바 매판적 세력으로 적응한 세력과 부적응하거나 저항했던 일반민중 사이의 계급적 분열이 있었고 이 분열은 (조선의 경우) 친일과 반일, 친제와 반제 세력 사이의 갈등이라는 사회내화된 형태를 취하였고, 그만큼 사회적 분열은 깊었다. 그 결합은 사회를 내파(內破)시킬 수준의 강력한 긴장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해방후 한국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둘러싼 이데올로기 경쟁 상황을 평가할 때는 그 같은 역사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후 세계질서에서 국제공산주의와 지역 공산주의 세력들의 이데올로기적 무기는 사회혁명과 식민지 과거청산이었다. 이에 대해 한반도를 포함한 점령지에서 미국이 내건 최대의 무기는 “자유선거”(free election)였다. 전후 소련이 군사적으로 해방시킨 동유럽에서 소련의 일방적 지배를 저지하기 위해 트루먼행정부가 제기한 최대의 무기가 또한 “자유선거 실시”였다. 물론 동유럽의 소련 점령지역에 새로운 정부들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자유선거는 폴란드의 경우에서처럼 반공주의 세력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선거를 의미했다. 그러나 남한을 포함한 자신의 점령지역에서 미국이 실천하는 자유선거는 “미국의 질서”를 거부하는 좌파에 대한 정치적 배제를 전제하였다.

미국은 남한에서 단독정부수립과 “자유선거”를 추진하기 전에 이미 “좌파의 배제”를 확보하고 있었다. 1946년 여름에 박헌영을 포함한 남한의 공산주의 좌파에 대한 불법화는 완성되어 있었고, 그 해 10월 “대구폭동”으로 규정된 인민봉기는 그러한 조건의 반영이었다. 만일 미국의

남한 단독정권수립작업이 미국의 질서를 거부하는 좌파의 참여도 보장되는 질서에서 이루어졌다면 제주4.3의 경우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는 없었다. 또 미국이 자유선거의 정신을 존중하였다면 남한 단독정권 수립을 애당초 그렇게 서두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 시기 미국이 말하는 “자유선거”는 소련 및 세계 식민지사회 전반에서 전개되고 있던 공산주의 운동과 싸우는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편주의적 무기였다. 그것을 무기로 썼을 뿐, 그 보편주의의 내용을 채울 의도를 미국은 갖고 있지 않았다.

1948년 남한 단독의 이승만정권 성립은 이와 같은 “좌파의 폭력적 배제”를 전제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형식의 폭력적 부과라는 형태를 띠었던 것이다. 그 자유민주주의의 형식에 내용을 담고 자유선거의 진정한 의미를 살려내는 노력은 물론 한국인 자신들의 몫이었다. 그 노력은 미국의 도움 속에서가 아니라 미국이 한반도에 스스로 규정한 편협한 국가이익과의 대립 속에서 전개되었다.

서구 정치질서에서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의회주의에 대한 적응 속에서 역사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자유민주주의는 포용적인 정치적 장치였으며 이질적인 사회이념들을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사회변화를 평화적으로 체제 내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가능했다. 전지구적인 식민지들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체제가 확립되는 시기와 동시에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는 제국주의 내부의 사회적 모순이 식민주의를 통해 해소되는 것과 무관한 것은 아니었다. 어떤 선진 제국주의 국가들의 자유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포함한 내부의 급진운동을 체제 내적으로 순화시키고 흡수해내는 장치였다.

전후 미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된 제3세계 사회에서 “자유선거”를 핵심코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정치에 개입하는 역사적 맥락은 매우 달랐다. 사회주의를 포용할 수 있는 원래적인 포용적 장치가 아니라, 사회주의에 반대되고 대립되며 그것을 배제하는 정치적 프로그램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 경우에 따라 제3세계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떤 이유로든지 포용성을 갖게 되어 좌익 민족주의자 또는 맑스주의자 집단이 자유민주적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경우에는 1953년 이란, 1954년 과테말라, 1973년 칠레에서처럼 미국이 주도한 가운데 사회주의세력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다시 폭력적으로 배제하는 사태들이 발생하곤 하였다. 그래서 전후 냉전체제 하 제3세계 정치사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사회주의세력을 배제하는 배제의 메커니즘이기도 했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정치보다도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반제 급진 민족주의의 이념과 함께 사회주의의 이념과 정치가 더 호소력을 가지곤 했던 역사적 맥락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대척되는 신념체계로서 위치 지워지곤 하였다.

그 결과, 전후 한국을 포함한 제3세계에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동의어(同義語)가 아니었다. 미국이나 서구적인 맥락의 민주주의의 틀보다 더 광범하고 깊은 사회적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변화를 지향하는 사람과 집단의 노력에 의하여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틀이 정립되기에 이른 시점은 세계가 냉전의 질식상태로부터 벗어나는 시점과 일치했다. 자유민주적 질서로 변화해 가는 사정은 미국의 영향권 밑에 있던 사회들뿐 아니라, 소련 공산주의의 영향권에 있던 동구 사회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같은 변화는 마침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동시대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역사의 끝”으로 규정되었으며, 그와 함께 민주주의적 진보의 시간은 “자유선거의 자유민주주의”에서 멈추었다. 하나의 역사적 장벽에 부딪친 것이다.

“자유선거의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 발전의 시간이 멈추고 있는 현상은 ‘민주적 자본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세계화되고 있는 역사적 상황에서 전지구적인 현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현상은 한반도의 경우에 좀 더 비극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동구사회들과 달리 한반도의 절반인 북한이 정치질서변동 시간이 여전히 냉전시대의 시간표에서 멈추어 있다는 사실이 그 하나이며, 남한의 민주정치 수준과 정치이념적 성격은 분단체제의 지속 속에서 분명한 제약 속에 놓여있다는 사실이 다른 하나의 진실이다. 그리고 그 구조의 한 가운데에 여전히 미국이 놓여있는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장악하고 있는 군사적 주권은 남한과 북한의 정치 모두에서 정당한 정치적 어젠다의 범위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힘과 구조로 남아있다. 남한정치에서는 정당한 안보정책, 정당한 대북정책의 수준과 범위가 한계지워진다. 그것은 다시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포용할 수 있는 이념적 스펙트럼과 그 내부의 권력배분의 테두리를 정하며, 제한된 인적 물적인 국가자원의 배분체계를 결정하고 한계 짓는다. 그럼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내면적 심화를 제약한다. 물론 그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방식은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 못지 않게 오랜 미국의 질서 속에서 비대하게 성장한 대미 의존적 정치사회세력의 전사회적 지배와 그것이 결과한 한국사회 전반의 대미 정신적 종속성의 결과이다.

한반도에서 “민주적인 삶”, 결국 민주주의의 의미는 자주성에 바탕한 평화의 구축과 그러한 경로를 통한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목표를 담고 있고 또 그래야 한다. 많은 경우 그 목표와 가치는 미국의 집권정치세력이나 지배적인 사회세력이 규정한 미국의 국가이익과 충돌하곤 한다. 하지만 미국이 전후 한국에 좌파적 가치들에 대한 폭력적 배제를 통해 심어놓은 자유민주주의의 형식에 내용을 담는 노력이 한국인 자신의 몫이었듯이, 미래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와 한반도적 실현 역시 우리 자신의 몫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